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1. 추진배경

□ 현행 농산물 유통은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효율화되어 있으나,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에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는 구조

* 유통비중('17, aT): (도매) 도매시장 58.9%, (소매) 대형유통업체 31.1

○ 특히, 중소농은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16.1.14 발효)으로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에 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공공급식에 국내산 또는 지역산 농식품(로컬푸드) 우선 공급 가능

* 미국·EU·일본은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94)부터 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정부조달 급식 식재료에 대해 자국산 및 로컬푸드 우선 사용중

▶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①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②중소농 소득 증대, ③가공·물류 등 지역 일자리 창출, ④유통비용 및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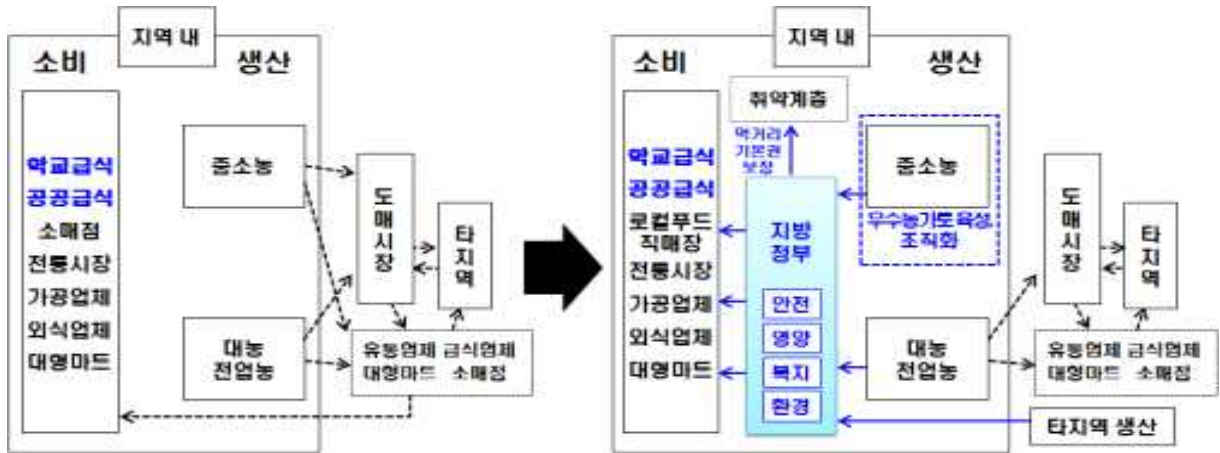
2.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지역 푸드플랜) 개념 및 유형

□ (개념) 먹거리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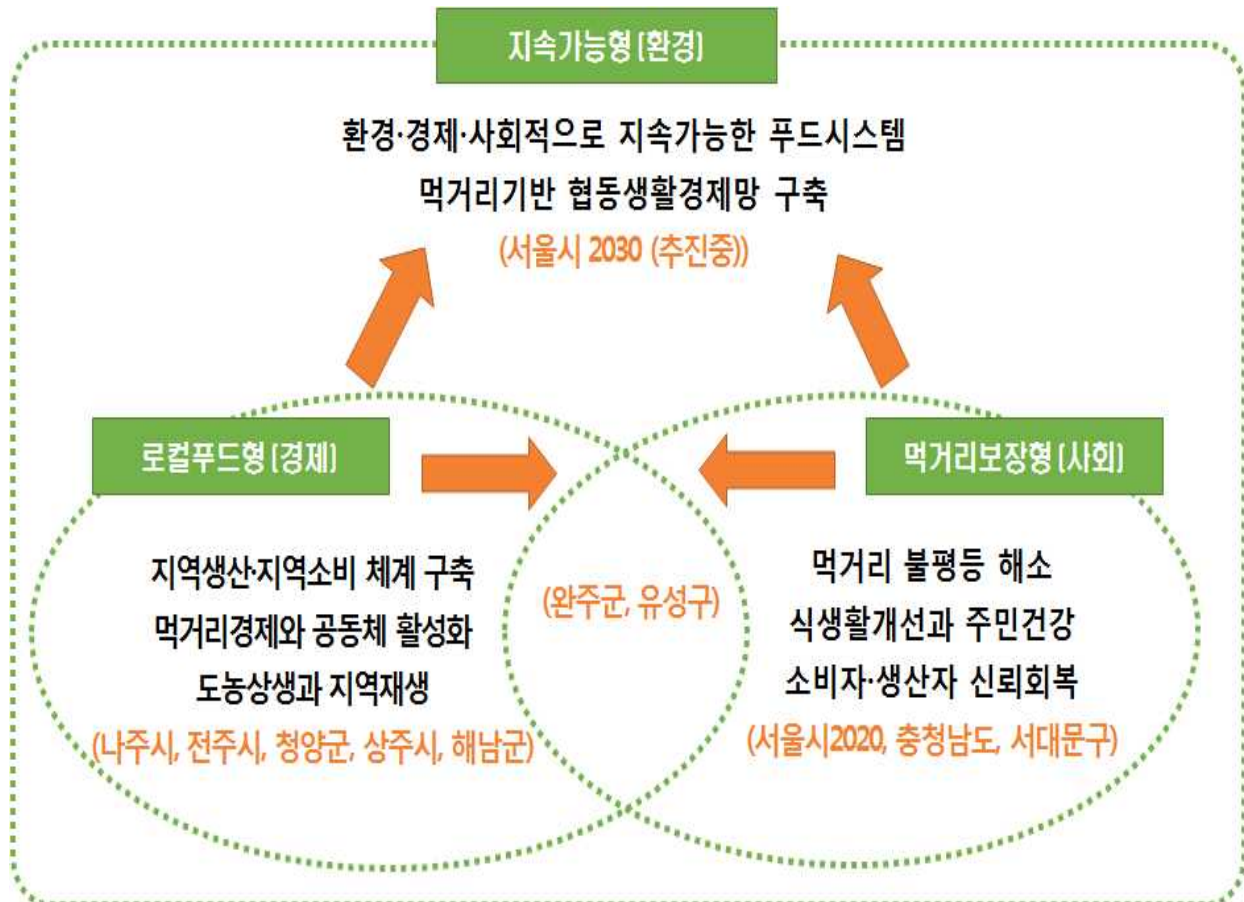
○ 로컬푸드 활성화 등 신선·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공급체계 마련

<기존 먹거리 체계>

<지역 푸드플랜 하에서의 먹거리 체계>



- (유형) 지역별 여건·특성 및 추진단계에 따라 3가지 유형(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으로 구분(2019,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일반적으로 로컬푸드형 또는 먹거리보장형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되며, 지속가능형은 푸드플랜의 완성 단계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현황) 공공급식에 대한 로컬푸드 공급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사회-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정착·확산 추진
 -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마중물로서 공공기관·군대 급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모델 창출·확산 중
 - * '19년 기준, 45개 지자체(광역 4, 기초 41)가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
 -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선순환 종합전략) 수립·실행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 65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50)에서 푸드플랜을 수립·실행 중
 - 시민사회-지자체 주도로 지속 확산하기 위해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20~'22)」 수립('19.6월)하여 추진 중
- (계획) 시민사회-지자체 중심으로 내실화 및 전국적 확산
 - 푸드플랜 추진단계에 따라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패키지 지원 - 푸드플랜 수립 완료 - 수립 중 - 미추진)하여 체계적 지원·관리
 - 시민단체,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지역 푸드플랜 전국대회' 개최
 - 로컬푸드 기반 우수 사회적모델 공모전, 슬로건·로고송 등 핵심 콘텐츠 개발·전파 등을 통한 자생적 가치 확산 유도
 - 공공급식·직매장 등 로컬푸드 소비점점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기관·정부·군·학교 등으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 지원
 - 사회적농장의 직매장 입점 지원 등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강화

참고1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현황

□ 지역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20.2월, 65개소)

○ 광역 15개(대구·광주 제외), 기초 50개(도농복합형 32, 농촌형 14, 도시형 4)

구분		지자체	
		기초(50)	광역(15)
~'17년	자체 수립 (4개)	전주, 화성, 옥천	서울
'18년	수립 지원 (9)	서대문구, 유성구, 청양, 해남, 완주, 나주, 춘천, 상주	충남
	자체 수립 (6)	군산, 아산, 홍성	경기, 경남, 세종
'19년	수립 지원 (23)	경기 5(수원,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충북 1(괴산), 충남 2(서산, 부여), 전북 3(익산, 김제, 부안), 전남 3(담양, 순천, 장성), 경북 2(구미, 안동), 경남 3(거창, 김해, 진주), 대전 1(대덕구)	부산, 전남, 제주
	자체 수립 (5)	광주, 시흥, 평창, 당진	대전
'20년	수립 지원 (18)	강원 1(홍천), 충남 2(금산, 예산), 전북 1(남원), 전남 2(광양, 영암), 경북 3(김천, 영주, 칠곡), 경남 2(거제, 통영), 광주 1(광산구)	강원, 경북, 울산, 인천, 전북, 충북

□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19.12월, 45개소)

○ 광역 4개소, 기초 41개소

구분	지자체	
	기초(41)	광역(4)
~'17년(4개)	완주('12), 부여('15)	세종('16), 서울('17)
'18년(9개)	담양, 나주, 화천, 춘천, 화성, 금천구, 청양, 군산, 유성구	
'19년(32개)	이천, 해남, 장성, 영암, 포천, 동대문구, 송파구, 서대문구, 구미, 칠곡, 김제, 옥천, 영등포구, 상주, 공주, 동작구, 강동구, 당진, 노원구, 서천, 광주, 괴산, 남해, 무안, 부안,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아산, 전주	경기, 충남

참고2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현황(7.1조원)

구분	시장규모 (식재료/억원)	식수인원 (만명)	계약주체	근거법	관련부처	급식소수 (직영비율)	보조금 (국비/지방비)	비고
공공기관	796	13	기관장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학교	32,000	574	학교장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11,800 (97.8%)	지방(2조) *학부모 1.5조	-
유치원	2,500	68	원장	유아교육법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9,000 (93%)	국고 지방비	학교급식에 포함 예정
어린이집	5,000	140	원장	국가계약법 / 영유아보육법	복지부 지자체	43,300 (조사중)	지방& 학부모	국공립 2,000개
군대	12,000	50	방사청-농협, 일반 군지사- 단위조합	국가계약법 군급식품목 조달협정서 접경지지원 특별법	국방부 방사청	2500 (100%)	국고	농협 공급체계
경찰청	500	2	경찰서장	국가계약법	행안부 경찰청	148 (100%)	국고	의무경찰 폐지 예정
교정시설	500	5	교도소장	국가계약법	법무부	50 (100%)	국고	
국공립 병원	1,494	12.7	병원장	의료법/ 지방계약법	복지부 지자체	212 (58%)	국비(50%) 환자(50%)	
사회 복지시설	9,800	23	기관장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자체 복지부 여성가족부	2,740 (조사중)	지방비	50인 이상
고령자 공동급식	6,536	84	노인복지 시설 각 기관장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	7,231 (조사중)	지방비& 본인부담	

참고3 로컬푸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미시건주 사례)



Let's look at Michigan, for example

Imagine if Michigan residents and institutions shifted just 20 percent of food purchasing to local sources. According to economist Michael Shuman's "The Economic Impacts of Localizing Michigan's Food System,"* this shift in demand leads to a shift in supply that creates jobs, revitalizes communities and boosts the economy. It's a model for how communities and states can redesign their food system.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Fair Food Network at
info@fairfoodnetwork.org or 734-213-3909
for more information. To read the full report,
visit fairfoodnetwork.org/resources.



* Data from "The Economic Impacts of Localizing Michigan's Food System" by Michael Shuman, Cutting Edge Capital, June 2013.
Michael Shuman is an economist, attorney, entrepreneur, author and director of Research and Marketing for Cutting Edge Capital.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민들이 활짝 웃으며 직접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나주=서연정 기자 yjseo@jma.com

'나주 로컬푸드' 신선하고 건강한 안심먹거리로 인기

농식품부-전남도-나주시 손잡고 로컬푸드 공급확대 나서
한국전력 aT 등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14곳과 업무협약



전남 나주 및 가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달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농산물마다 생산자와 이윤과 영권이 표시되고, 제조부와 경우 담입에 수화할 것만 판매하기 때문에 안심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 중소 기업농, 마켓농, 공동농업체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어 준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 농산물협의체 손잡고 지역 마켓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남도, 나주시와 함께 나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14개 공공기관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전력 지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기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 에너지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공 등 구매처를 관여하는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내 로컬푸드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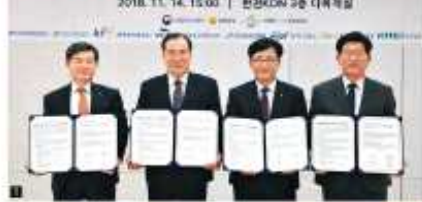
와 나주시는 공공기관에 로컬푸드를 위한 체계 인형적으로 공급하며, 공공기관은 구매처인 각종 행사, 명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구매처로 늘어난 로컬푸드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 7월 발표한 '생수권 체계 구축 로드맵(2018-2022)'을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역군이 있는 로컬푸드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혁신도시 선도모델로 나주시를 선정하고, 공공기관 참여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참여기업과 함께 소비를 중심으로 한 공평한 농가 조직화부터 유통-유통시장을 확대, 수-유통 시스템까지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개 공공기관에서 구매처인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4개 기관에서도 나주시 로컬푸드 공급 협력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활용 선도모델을 위한 혁신도시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역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 지역별 지자체에 대해 10년부터 관련 농민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도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경우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유통은 일자리 창출, 유통비율 감소, 환경개선 등 여러 효과를 다스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



14일 전남KON 본사에서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왼쪽)은 나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대표들과 로컬푸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계호 장관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이 전사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이계호 장관은 "앞으로 이를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청에서 회의



로컬푸드 사업으로만 연매출 608억원...

‘인구 10만’ 소도시 완주는 어떻게 사회적경제 리더가 됐을까?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모델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가 있다. 인구 9만 4000명의 소도시 전북 완주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 등 완주는 안에만 4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한다. 현재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9000여 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완주의 사회적경제는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떠나바뀌어질수록 총총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품목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원·육성해 왔다. 양면·세종 등 다른 도시에서도 완주 모델을 가져다 쓸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로컬푸드 1번지 직매장 12곳... 지역 농산물 모두 지역에서 소비 농산물·가공식품 생산하는 ‘마을회사’ 111개 농가 소득 2배 이상 늘고, 소비자가격 30% 낮춰 농가레스토랑과 유·초·중·고 급식도 연계

민중 명확한 역할 분담 중간지원조직은 조직 발원·사업 연계 등 실무郡은 예산 지원·인프라 구축 등 든든한 뒷받침 인구 유입 효과 불러... 지난해 2697가구 귀촌

완주군이 꿈꾸는 내일 100여 명 구성 ‘소셜굿즈 테크노프스’ 출범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품목 확대할 것

완주 사회적경제의 중심 ‘로컬푸드’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저렴하게 사서 저녁에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으니가 얼마나 좋아요.’

지난 20일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체험장에서 만난 주부 김성미(40)씨의 장바구니에는 배추·양파 등 농산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이만큼 사면 3만원은 줘야 하는데, 여기는 2만이면 된다’며 ‘주머니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미소 지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린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는 로컬푸드 개념을 2012년 국내에 처음 들여와 전국에 퍼뜨렸다. 세계적으로도 성공 모델로 꼽힌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해 완주를 로컬푸드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정책을 펼쳐 여러 가지 혁신을 낳았다. 소규모 농가에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했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수백개 생겨나 지역에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완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모두 12곳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만 608억원에 달한다. 판매 품목은 모두 지역 농가에서 공급된다. 경작 면적이 1ha(1만㎡) 미만인

소농(小農) 5800여 곳 가운데 2500개 농가(43%)가 참여한다. 읍진읍에 첫 직매장이 들어선 2012년과 비교해 참여 농가는 8배, 매출은 11배나 뛰었다.

완주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드는 중간 유통면이 없다. 협동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중개한다. 매일 새벽 농가가 농산물을 가져오면 협동조합은 이를 대신 판매하고 운영비·연건비 등 명목으로 10%의 수수료만 받는다. 매대에는 토양·농업용수·전류농약 등 검사를 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기준을 만족한 농산물만 유통시킨다. 농가는 기존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득이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소비자는 30% 정도 쌀 가격이 안전한 먹거리라는 실수 없이 모두에게 이득이다.

완주의 사회적경제 조직 가운데 2500여 곳이 로컬푸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마을 회사는 직매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참여하는 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성원은 공동으로 농산물·가공식품을 만들고 수익을 나눠 갖는다. 순수익의 20%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 현재 향가를 만드는 서계마을, 두부를 만드는 원음복마을 등 111개 마을회사가 운영 중이다.

두레농장은 로컬푸드와 연계된 완주의 복지 모델이다. 농장은 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군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노인·장애인·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에 흩어져 있는 두레농장은 모두 10곳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유통된다. 이 밖에 가공식품업체 50여 개, 마을회사 이전 단계의 마을공동체 100여 개 등이 로컬푸드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완주의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월간지 ‘완주행’을 발행하는 완주공동체협동조합 로컬푸드와 무관하지 않다. 조합의 연간 매출은 3억원대. 이윤규 대표는 “잡지로는 직장을 보고 있지만 로컬푸드 관련 홍보·출판·인쇄 업무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혼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역 청년 5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정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성장 배경은 민관의 신뢰 완주 로컬푸드는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공시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다. 완주는 지난 200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만들었다. 예산과 조직 등 법적 근거를 명시한 조례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조항도 담겼다.

강행석 완주군 사회적경제과장은 “사람이 자주 바뀌는 탓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공무원 조직 만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다고 여겼다”며 “행정과 주민 사이의 다리가 돼 줄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작업부터 착수했다”고 말했다.

완주는 철저하게 외부인의 시선에서 지역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희망제작소에 의뢰해 연구진이 완주에서 2009년부터 1년 6개월간 마을



숫자로 보는 완주 사회적경제

- 30% 완주군은 2025년까지 군민 30%를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 421개 완주에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회사 등 모두 42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 9,000명 완주 전체 인구의 약 10%인 9000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
- 60,800,000,000원 지난해 완주 로컬푸드 연간 매출은 608억원에 달한다.

할 수 있게 하는 ‘로컬푸드 가공센터’ 설립도 완주군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였다. 현재 완주 고산면과 구미면에 설립된 가공센터 두곳에서 청국장, 쌀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완주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5년간 4877가구였던 귀촌·귀농 가구가 2013년 한 해에만 5300가구에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697가구나 귀농·귀촌했는데 39세 미만 청년 가구가 30%(8167가구)에 달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이맘’의 최태현 대표는 “완주는 사회적 기업에게 매우 친화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수교육 전공을 살려 소셜벤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사업으로 연결할 길이 막막했다. 무작정 완주 군청에 찾아가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초기 지원금과 사무실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줬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근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못 내리고는 민관이 얼마나 서로 신뢰를 구축했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협정이 예산을 무기 삼아 무리하게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면 민관은 의욕을 잃는다. 반대로 민관이 행정의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행정은 협력을 거부하게 된다. 완주군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민간과 행정의 신뢰를 무척 많이 쌓은 덕분에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제 로컬푸드 1번지를 넘어 ‘사회적경제 대표 도시’를 꿈꾼다. 지난 3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학자, 군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소셜굿즈(social goods) 테크노프스’를 출범하고 2025년까지 전체 군민의 30%를 사회적경제에 참여시키고, 300개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셜벤처를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소셜굿즈 테크노프스 자문위원인 장현식 농림축산식품부 퇴직관료는 “완주에서 2009년부터 1년 6개월간 마을

① 완주 내 2500여 개 농가는 매일 새벽 완주 지역에 있는 12개 직매장에 수확한 농산물·가공식품을 납품한다. ②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혁신집에 완주군청, 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마을 회사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 350여 종류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혁신집은 지난해에만 47만8000여명의 매출을 올렸다.



참고6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

비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

목표

- ◆ 로컬푸드 대국민 인지도 : ('19) 49.4% → ('22) 70%
- ◆ 로컬푸드 유통 비중 : ('18) 4.2 → ('19) 6 → ('22) 15%
 - '22년까지 공공기관·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70% 달성
 - '22년까지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참여 지자체 100개
 - * 로컬푸드 성공모델 지자체 10개 육성, 7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

- ◆ (분야) 공공부문 선도모델 구축 ⇒ 학교·민간시설로 확산
- ◆ (주체) 정부가 선도지역 중심 마중물 역할
⇒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 중심으로 전국 확산

추진과제

1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 ①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역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 ②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푸드플랜 수립 지원, 먹거리 계획 협약 및 패키지 지원, 로컬푸드 가격지표 마련
- ③ **대국민 로컬푸드 인식 제고**
 - '로컬푸드 지수' 개발·운영, 핵심콘텐츠 제작·홍보, '로컬푸드 서포터즈' 지원

2 중소가족농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①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해 월급받는 농업인 육성**
 - 중소농 중심 조직화·교육, 연중 기획생산 매뉴얼 구축, 광역단위 연계 공급
- ② **로컬푸드 기반 가공산업 활성화**
 - 공동체 기반/지역농산물 활용 식품 가공 활성화, 로컬 가공식품 판로 확대
- ③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
 - 사전 안전·품질관리 지원,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정부지자체 인증 참여 유도

3 소비자가 안심하고 누리는 지역 먹거리

- ①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지역먹거리 소비체계**
 - 혁신도시 공공기관/군대 급식 로컬푸드 확대, 공공부문 성과 분석, 물류체계 구축
- ②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먹거리 확대**
 - 학교급식/사회복지시설 등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③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 직매장 확충 및 기능 다양화, 도시형 먹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역 외식업과 연계